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제6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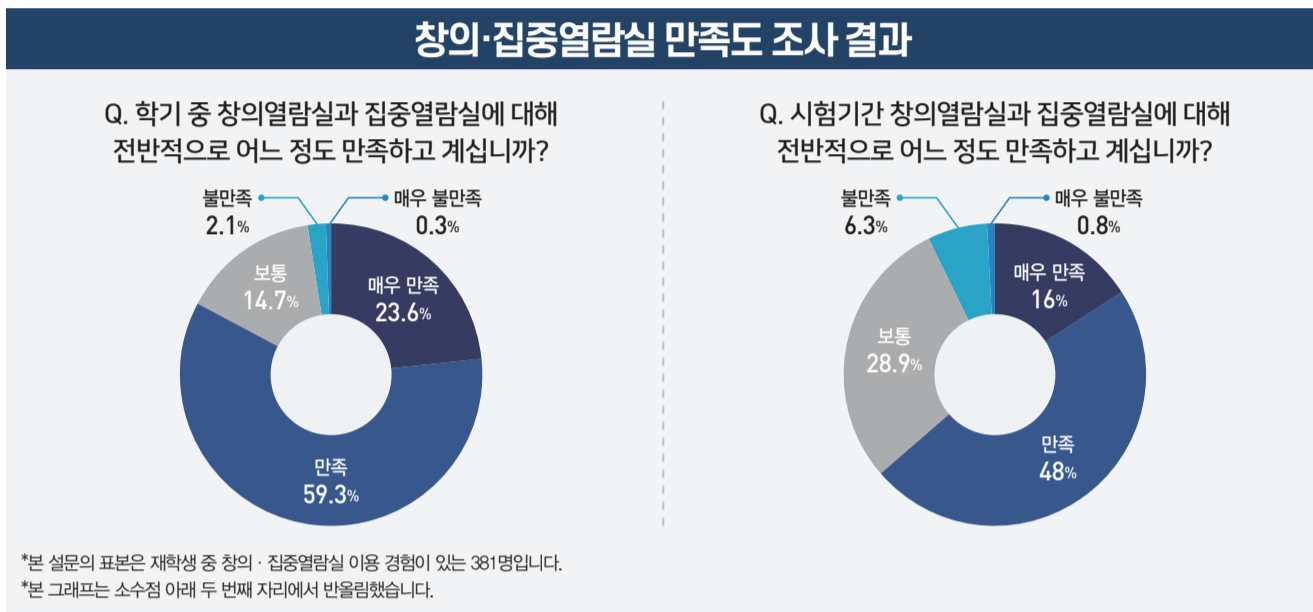
지면안내 04 기획 사모펀드의 그림자, 기업을 삼키다 05 사진기획 눈물과 환호로 뒤덮인 광장 06 학술 관세를 둘러싼 줄다리기, 국익의 밧줄을 당기다 08 광고 제19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창의·집중열람실, 호평 속 불편사항 일부 존재

중간고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학술정보관 내 미래관 3층의 창의열람실과 4층의 집중열람실이 24시간 개방된다. 이에 본사는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창의·집중열람실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본교 재·휴학생 총 42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창의·집중열람실 이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381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창의·집중열람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비롯해 ▲이용 경험 유무 ▲시설 및 위치 ▲청결도 ▲크기 및 좌석 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창의·집중열람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학기 중 열람실 사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기 중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3.6%)', '만족(59.3%)'이라고 기록돼 총 82.9%가 만족 의견을 남겼다. 김재윤(산공 3) 학생은 "학습하는 데 특별히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의·집중열람실 만족의 이유는 쾌적한 학습 환경이 가장 많았다. '학기 중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대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습 환경이 쾌적해서(79.7%)', '접근성이 높아



방문하기 편리해서(54.1%)'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김동은(미래모빌리티 1) 학생은 "카페 등의 시설보다 창의·집중열람실이 쾌적해 만족도가 높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창의·집중열람실의 시설과 위치는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 시설 및 위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32.8%)', '만족(53%)'으로 집계되며 85.8%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의 이유는 '열람실로의 접근성이 좋아서(64.5%)', '와이파이, 전자기기 연결

등 편의시설이 충분해서(51.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동은 학생은 "창의열람실은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도 용이하고, 와이파이가 콘센트 사용이 편리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청결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 의견이 도출됐다.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의 청결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만족(32.5%)', '만족(50.1%)'의 응답이 기록되며, 82.6%가 만족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만족 이유로 '책상, 복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아서(80%)', '모

기 등 해충이 쉽게 보이지 않아서(53.7%)' 등을 꼽았다. 김재윤 학생은 "창의·집중열람실 공간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학생이 청결도에 대해 만족 의견을 표했으나, 화장실 악취에 대한 불만사항도 일부 도출됐다. 오정선(컴공 4) 학생은 "창의·집중열람실을 이용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느낀 적이 있어,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훈(학술정보관) 팀원은 "건물 내부의 환기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공기 순환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창의·집중열람실의 크기 및 좌석 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의 크기 및 좌석 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만족(13.6%)', '만족(36.5%)', '보통(32.8%)', '불만족(15%)', '매우 불만족(2.1%)'의 응답이 도출됐다. 현재 창의·집중열람실의 좌석은 각각 123석, 168석이 마련돼 있다. 최정선(사회과학 3) 학생은 "창의·집중열람실의 크기에 대해 크게 불편을 느낀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창의·집중열람실 방음에 대해서는 각각 만족 의견이 과반을 웃돌았다. 창의열람실 방음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20.5%)', '만족(44.1%)'으로 64.6%가 만족했으며, 집중열람실 방음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19.7%)', '만족(43.6%)'으로 63.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남겼다. 만족 이유는 모두 외부 소음이 열람실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하호철(폐선 1) 학생은 "떠드는 소리나 대화 소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임지민 기자 hjimin0103@naver.com

비교과장학금 신설, 오는 2학기 첫 지급

'한성도전장학금(비교과장학금)'이 신설돼 올해 1학기 활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성도전장학금은 재학생의 비교과 포인트와 대외활동 수상 내역 등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이번 장학금 신설은 지난 2월 학생처의 한성인재장학금 개편 과정에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포인트를 분리한 데 따른 조치다.

수혜 금액은 최우수자와 우수자에게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재학생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생활비성 금액으로 부여될 계획이다.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되는 방식과 달리 한성도전장학금은 재학생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한성성공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

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선발 기준은 1트랙을 기준으로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술·디자인계열 ▲공학계열로 구분된다. 자신이 어떤 계열에 소속돼 있는지는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열별로 최우수자는 1명, 우수자는 250대 1 비율로 선발된다. 권상집(학생성공센터) 센터장은 "창의융합대학의 경우 다양한 계열의 트랙·학과의 존재하기 때문에 단과대학별로 선발 단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혜 학생은 학기별 취득 비교과 포인트와 가산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가산점은 대외활동 중 수상내역에 따라 부여되며 국제·전국단위 활동에서 수상 시 10점,

시·도단위 활동에서 수상 시 50점이 추가된다.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인 HSP(High Success Project) 참여 시에도 2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권 센터장은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이 HSP에 포함된다"며 "외부 수상 외에도 HSP가 학교 차원에서 장려하는 중장기적 프로젝트기 때문에 가산점 내역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동점자 발생 시 한성인재인증제의 이수 여부를 통해 판단된다. 한성인재인증제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수료한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성인재인증제 중 ▲도전과 성취 ▲역량개발 ▲대학생활적용 프로그램 이수자 순이다. 도전과 성취 프로그램에는 창업동아리,

역량개발 프로그램에는 교내외 공모전, 대학생활동 프로그램에는 한성인글쓰기대회와 한성인프레젠테이션대회 등이 있다.

장학금 지급은 비교과 활동이 수행된 시기의 다음 학기에 이뤄진다. 1학기 활동에 대한 장학금은 10월, 2학기 활동에 대한 장학금은 다음해 4월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단, 지급시점의 재정상태는 '재학'이어야 한다. 권 센터장은 "군 휴학 등 불가피한 휴학이 다음 학기에 예정돼 있는 학생에 대한 보완책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우수자로 세 차례 선정된 학생은 '한성 Best도전인'으로 지정되며 이후 최우수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동일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최우수자로 선정되는

상황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에게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한성 Best도전인으로 선정된 이후 우수자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 권 센터장은 "한성 Best도전인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본부 측은 한성도전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현재 우수자 선발 기준이 250대 1이지만 향후 선발 학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한성도전장학금이 비교과 부문의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재선거 종료, 17개 학생자치기구 선출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4월 2·3일 양일간 실시됐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및 각 트랙·학과(부) 등이 대상이었다. 회장, 부회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한 동아리연합회는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았다.

제9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해움' 선거운동본부의 함지현(인

문 3) 정학생회장 후보와 박재원(인문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431표(77.52%)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재적인원 1020명 중 556명(54.51%)이 참여했다. 함 당선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제29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하나' 선거운동본부의 문정기(사회과학 2) 정학생회장 후보와 배지현(사회과학 4)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579표(78.78%)를 얻어 당선됐다. 재적인원 1339명 중 735명(54.89%)이 투표에 참여했다.

문 당선자는 "학생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2대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WON(위온) 선거운동본부 하승철(미플 3) 정학생회장 후보와 이유림(미플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246표(91.45%)를 얻어 당선됐다. 재적인원 461명 중 269명(58.35%)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 당선자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을 원하는 부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한국 어교육트랙의 트랙학생회장, 무용학과와

회화과의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제무역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기업·경제분석트랙 ▲경제금융투자트랙 ▲법·정책트랙 ▲부동산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당선됐다. 디자인대학에서는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트랙의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으며, IT공과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의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창의융합대학에서는 융합보안학과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한편,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동아리 연합회에 관해 이연준(컴공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단위에서 후보자등록 및 당선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동아리연합회 관련 예산인준 및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표 종료 10분 전 투표율 50%를 넘겨 선거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총선거 때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hgim4250@gmail.com

시험기간 열람실 자리 비움 문제, 대책은?

시험기간 창의·집중열람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평상시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기간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만족(16%)', '만족(48%)'의 답변이 기록돼 64%의 응답자가 만족했다. 김리경(ICT 1) 학생은 "시험기간에는 시험기간이 아닐 때보다 창의·집중열람실의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워 비교적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시험기간 창의·집중열람실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로 기록됐다. '시험기간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대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접근성이 높아서(65.2%)', '학습공간이 쾌적해서(63.1%)', '학습공간의 좌석이 많아서(20.1%)' 등의 답변이 기록됐다. 조용국(시응용 1) 학생은 "학술정보관과 다

른 공간들로 왕래하기 편한 점이 시험기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시험기간 창의·집중열람실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표한 학생 중 일부는 학습공간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시험기간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학습공간의 좌석이 부족해서(81.5%)', '학습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37%)'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김리경 학생은 "시험기간에 방문했을 때는 자리가 부족한 경험을 해 불편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험기간에 집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학생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기간 중 일부 학생들이 창의열람실과 집중열람실에 집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도 3~5시간가량 자리를 비

우며 다른 학생들이 학습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선데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55.6%)', '아니오(44.4%)' 응답이 집계됐다. 최지영(사회과학 3) 학생은 "시험기간 이른 아침에 창의열람실을 찾으면 사람 없이 자리에 짐만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장시간 자리 비움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학생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시험기간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에 집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예(9.4%)', '아니오(90.6%)'의 응답이 확인됐다.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69.4%)'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75.7%)'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조 학생은 "시험기간에 가방만 자리에 놓고 이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현상이 학습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감독 강화, 열람실 이용 제한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시험기간 창의열람실, 집중열람실에 집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62.5%)', '열람실 이용에 제재를 가한다(49.9%)'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양민기(사회과학 4) 학생은 "시험기간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시간 자리 비움 금지 등의 안내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재운 학생은 "장시간 자리를 비운 학생이 2~3번 적발될 경우 한 달 이용 금지 등의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학술정보관은 창의·집중열람실 앞에 장시간 자리 비움 행위를 지양하는 안내문을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팀원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운 학생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개인 물품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험기간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게시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학술정보관은 시험기간 동안 창의·집중열람실 외에도 다양한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팀원은 "창의·집중열람실을 자유로운 학습 공간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2~6층 열람실에도 학습 편의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 해당 공간들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임지민 기자 hijimin0103@naver.com

미래관 승강기 일부 결함... 본부 "교체 예정"

미래관 승강기 3호기(이하 3호기)가 노후화 및 기기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3호기는 미래관 지하 2층과 지상 2층을 오가는 승강기다. 해당 승강기는 노후화 문제뿐 아니라 승강기의 일부 부품 및 승강로 하부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올해 여름방학 중 3호기를 교체 예정이며, 그 외의 노후 승강기도 내년까지 전면 교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3호기는 '노후 승강기'로, 성능 저하 및 부품 고장의 위험이 존재한다.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따르면 3호기의 최초설치일은 2003년 7월 14일로, 설치 후 20년이 경과했다. 박현호(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팀장은 "승강기 부품의 평균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10~15년 정도"며 "노후 시 성능 저하, 오작동, 내부 구성품의 손상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화에 따라 3호기를 지탱하는 로프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한 기관의 '승강기 자체점검** 이력 조회'에 따르면 '로프(벨트)의 마모 및 파단상태'에서 B(주의관찰)라는 점검결과가 기록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호기의 자체 점검을 담당한 권형빈(하나로 M.G.M) 사원은 "승강기 구동을 위한 로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주의관찰이라는 점검결과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결과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3호기의 로프를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재도(자산관리팀) 부팀장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로프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판단하고 결과표에 '주의관찰'로 표기된 내용"이라며 "지금은 로프 교체 판단 기준 이하의 상태"라고 부연했다.

3호기의 수동 비상운전수단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수동 비상운전수단은 브레이크를 수동 개방해 승강기를 인접 층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승강기 작동이 멈출 경우 주요한 구출 수단으로 작용한다. 같은 기관의 '승강기 검사이력 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3호기의 '수동 비상운전수단의 설치 및 작동상태'에서 불합격을 받은 바 있다. 박 팀장은 "수동 비상운전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전이 발생해 승객이 갇혔을 때 승객 구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은 3호기가 비상 발전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해도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부팀장은 "교내 모든 승강기는 정전이 일어나도 변전실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통해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기간 진행된 검사에서 3호기는 '피트 청결상태 불량'이라는 불합내역 또한 확인됐다. 피트는 승강로의 가장 아래부분으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피트에는 승강기가 최하층을 지나쳐 움직

일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및 종점 스위치와 같은 여러 안전스위치 등이 설치돼 있어 청결이 중요하다. 박 팀장은 "피트에 먼지가 오랫동안 적체돼 각종 전기 장치에 붙으면 스위치의 오작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피트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팀장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정기검사 시마다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은 3호기를 여름방학 중에 교체할 예정이며 다른 건물의 노후화된 승강기 또한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까지 ▲우촌관 ▲담구관 ▲지선관 ▲공학관 ▲창의관 등의 승강기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한 부팀장은 "본교의 모든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연식에 따라 선제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3호기와 낙산관 승강기를 여름방학 중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구연한 :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월 1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동법에 따라 설치 후 2년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검사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사진 : 이승희 기자

2025 만우절 행사 마무리 만우절 행사가 지난 1일 교내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총학생회 'WE·RO' ▲디자인대학 'Synergy' ▲IT공과대학 '온울' ▲창의융합대학 '서로' 등이 부스를 운영했다. 총학생회비 납부자는 모든 부스에 무료로 참여 가능했으며, 미납부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 후 참여할 수 있었다. WE·RO는 '퀴즈 게임'과 '행동 게임' 등 2가지 종류의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계란과 함께 식혜나 매실 음료 제공됐으며, 두 게임을 모두 통과할 경우 물라면이 추가로 지급됐다. Synergy는 3가지 미니게임을 진행했다. 게임 기록을 경신한 학생 상위 3명에게 상품을 제공했다. 1등에게는 'BHC 뿌링클 +콜라.25L 세트'를, 2등과 3등에게는 '이마트 24 1만 원 상품권'이 증정됐다. 온울은 4종 릴레이 게임을 진행해, 해당 게임의 최단기록자에게 상품을 증정했다. 또한 만우절 행사를 기록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촬영과, 사탕을 매개로 학생들 간 만남을 임의로 주선하는 '사탕 소개팅' 등의 활동을 기획했다. 서로는 3가지 난이도별 퀴즈를 실시했다. 퀴즈의 정답을 맞힐 경우 상층화 난이도별로 다가가 배부됐다. 또한 엿에 별명,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을 적고 마음에 드는 엿을 선택해 상대와 연결시켜주는 '엿 소개팅'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형민(기계전자 3) 학생은 "만우절 행사를 통해 봄기운을 느끼며 대학의 낭만을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만우절의 축제 분위기를 가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우분들께서 행사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지민 기자 hijimin0103@naver.com

HANSUNG UNIVERSITY

2025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내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한성대 대학원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도약을 함께합니다.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경영학과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경영관리*				
			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문헌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					
			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경영학과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에·체능계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무역학과	국방과학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정책학과**	북한연구, 국방정책, 국방혁신				
			경제·부동산학과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메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ESG경영컨설팅				
			산업경영공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인성및국제인문학 석사전담학과, 베트남어-한국어***						
			기계시스템공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롬테크전공					
석사	공학계	미디어디자인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상당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AI·SW융합교육전공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언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IT융합공학과	언어영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시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 모집인원은 각 학과(전공) O형/OO형
 ** 비모집학과(전공)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전공)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전공)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 경영대학원 경영관리전공은 외국인특별전형(정원외) 모집 없음
 ****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는 일반전형(정원내)만 모집함. 군·공무원위탁특별전형(정원외) 모집 없음
 ***** 외국어대학원 언어영문학과는 일반전형(정원외)만 모집함. 군·공무원위탁특별전형(정원외) 모집 없음

중소기업 계약학과: 계약학과전형(정원외)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제품, 스마트팩토리컨설팅, ESG융합컨설팅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보안컨설팅, 스마트팩토리컨설팅, ESG융합컨설팅

* 계약학과전형 지원자는 대학원홈페이지 입학안내-입학공지에 게시된 별도의 모집요강을 통해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 수업형태는 야간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 기간: 2025. 4. 21(월) 10:00 ~ 5. 7(수) 17:00
- 접수 방법: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웨이이머플러지(http://www.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 고사: 2025. 5. 24(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5. 6. 4(수)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성상관 1002호)

있으나 마나 한 문화예술패스

제한 많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국내 도입 과정에서 논의 부족
청년 수요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문화예술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진 만큼 관람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이하 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문화예술패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보장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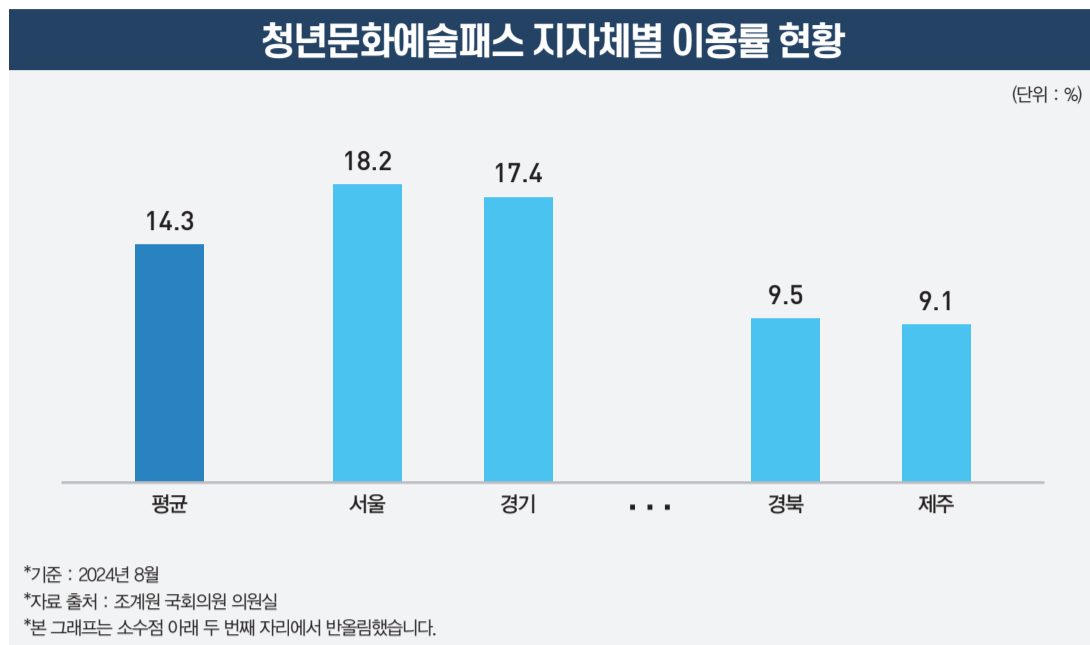
문화예술을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가 청년층이지만, 비용 등의 제약으로 온전히 문화예술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은 86.6%로 가장 많은 향유 연령층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화행사 참여 시 어려운 점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한 연령층은 15~19세가 22.7%, 20대가 22.8%로 평균 14.9%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POSTECH 무은재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주연 학생은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에 많은 부담이 든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것이 문화예술패스다. 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 대상이며 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15만 원의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매해 3월 초부터 5월 말일까지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으며, 선정 이후에는 12월 말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패스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간접 지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백선혜(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한 문화향유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문체부가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만 3,180명의 청년에게 약 148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 사용 금액은 14.3%에 불과한 21억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청년의 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과정에서 연령대가 오직 만 19세로 제한되며 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예술패스의 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 대



상이 폭넓게 선정돼야 하지만 단일 연령층에만 국한된 실정이다. 이에 청년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간접적 문화예술 산업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문화예술패스가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 편향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예술패스 신청 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발된다. 이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지역별 선착순 마감 인원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배정 인원이 훨씬 많게 배정되고 있다. 상술한 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문화예술패스 발급 비율은 서울이 92.2%였다. 이에 비해 경기 74.3%, 경남 55.9%, 부산 59.4% 등 타 지역은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문화예술패스 관람 범위가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문화예술패스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주로 음악 분야에 치중돼 있다. 그마저도 문체부측에서 지정한 공연 또는 전시만 관람 가능하다. 청년이 선호하는 영화나 음악 외 부문인 토크 콘서트 등에 활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상술한 문체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공연·전시만 보라는 식의 설계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익적 사고이자 경직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관람 범위가 좁은 상황에서 문화예술패스의 '기한 내 미사용분 회수 방침'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5월 말 이후 30일 이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액 회수되는 방안이다. 청년의 신속한 문화예술 향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지만, 회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인 문화예술패스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공연 또는 전시의 개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할 수 없는 청년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학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하지 못해 금액이 회수되

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술회했다.

문화예술패스의 연령 제한 문제는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문화패스(Pass Culture)'는 2018년부터 1년간 1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공연, 영화, 도서, 음반 구매, 예술 수업 등 전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2021년 전국으로 문화패스 지원이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 시행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문화예술패스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점이 수도권 편향 문제를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타난다. 현재 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칭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매칭 방식이란 하나의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며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매칭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패스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패스 사업 시행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가 부재한 점이 관람 범위 제한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체부가 문화예술패스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실제 관심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절차가 생략되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대학교 나노전자물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영 학생은 "청년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추가된다면 문화예술패스 사용률이 저조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용분 회수 기한 문제는 회수 재분배를 통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탁상행정에 기인한다. 1차 발급 후 미사용분은 2차 발급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2차 발급 심사 기간은 7월 초부터 11월 말

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재차 문화예술패스 가용 기간이 한 달에 남짓하게 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화예술패스 이용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패스 대상 연령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연령 확대가 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적인 청년의 문화소비를 신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윤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기획혁신연구실) 위촉연구원은 "만 19세뿐만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청년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들에게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칭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 간 사업 추진의 격차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른다. 김진각(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상이한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문화예술패스 발급 비율을 지정해야 한다는 해결책 또한 요구된다. 지역 간 문화예술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일정 수준의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을 보장해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패스 신청 기간 전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선호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패스가 청년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장르 또는 사용처 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향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학생은 "문화예술패스의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대해 미리 조사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지나치게 짧은 문화예술패스의 사용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화예술패스는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이 약 5개월로 지정돼 있다. 신청 기간을 줄이고 사용 기한을 늘린다면 관람률 증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다. 김 학생은 "사용 기한이 연장되면 문화예술패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문화예술패스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예술패스의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사업에서 탈피해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비

2025년 3월 4일 ~ 4월 27일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 **엄청난 장학금!**
(3.0 이상 시 70%, 3.0 미만 시 50%)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 매 학기 여우보생 장학금 100만원
- 입영훈련 봉급, 학군생활지원금 등

- **멋진 기회들!**
- 일반 병사가 아닌 '소위'로 임관
- 미국 텍사스 A&M대학 리더십 연수
- 한성대학교 기숙사 우선 지원

- **다양한 활동!**
- 1년마다 국내/해외 전·사적지방방
- 학군단만의 축제 '무제' 진행
- 타 학군단과의 교류, 선배들과의 만남

문의 02-760-4178 한성대학교 학군단 행정실

한성대 학군단
모바일 홍보관 >>

모집요강,
인터넷 접수 >>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 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 홈플러스 행복이 더해'. 익숙한 노래로 알려진 국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며 기업회생절차(이하 기업회생)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파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법원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이번 사태를 두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MBK가 사모펀드의 수익용으로 홈플러스를 운영한 결과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고 간 사모펀드는 무엇이며, 기업회생 제도는 왜 존재할까. 이번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와 기업회생에 담긴 경제 이론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함께 짚어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사모펀드의 그림자, 기업을 삼키다



기업에 깃든 두 얼굴의 자본

가계,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필수적으로 '금융' 활동을 수행한다.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금융이라 하며, 그 거래가 이뤄지는 경제적 공간은 금융시장이라 부른다. 금융시장 내에서 경제주체는 예금, 대출, 투자 등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며 경제 전반에 화폐가 순환하도록 돕는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저축하거나 소비하는 가계와 달리, 기업은 '투자'에 집중한다. 기업이 자본, 노동 등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박종원(서울시립대학교 재무학과) 교수는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활동은 '기업가치 평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가치 평가이론은 기업의 영업가치, 비영업가치, 부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현재 보유한 자산과 수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익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미래에 벌어들이 수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인식된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 기환(인하대학교 금융투자학과) 교수는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는지에 대해 평가되며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이 고려된다"고 전했다.

기업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투자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펀드(Fund)'를 활용한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자산운용사가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상품이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인 거액의 자금은 적은 이자율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 동시에 전문 운용인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진다.

펀드 내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루는 방식도 존재한다. 바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비공개로 펀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와 구별된다. 공모펀드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와 투명성 요구가 강한 반면, 사모펀드는 극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고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비상

장 기업 투자, 경영권 인수합병(M&A), 구조조정 기업 회생 등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사모펀드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순 투기성 자본이 아니라 기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생산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A(이하 A)가 유통업체 B(이하 B)를 인수했다고 가정하자. B는 A에 인수합병 되기 전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운영하는 형태를 띠며 낮은 마진 구조를 가졌다. 인수합병 후 A가 B의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매장 확대 등의 방법으로 B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수익을 얻는다. A는 사모펀드를 활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에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며 경제 전반의 이익을 높인 것이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며 경제 전반에 자금이 순환하는 등 긍정적인 부가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한 단기적인 수익 회수를 우선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의 비용 회수를 위해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급격히 축소하려는 방식이다. B의 오프라인 매장을 매각하며 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정책이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택할 경우 단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하며 투자자는 수익을 얻지만,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조직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교수는 "인수합병 이후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경우 기업 가치가 더욱 악화되며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극심해진다"고 밝혔다.

한번 악화된 기업 가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파산에 이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물론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대출금까지 상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 상환 지연은 금융시장 내 자금 흐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운용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업회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하면 기업은 즉각적인 채무 변제 의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회생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국가는 기업회생을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업 파산은 일자리와 협력업체에 연쇄 피해를 일으켜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가 채무 변제 의무를 지연시키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너진 신뢰 위 책임을 묻다

지난달 4일 국내 2위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합병한 MBK가 단기적인 자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경영방식을 보여온 만큼, 이번 기업회생이 재무 개선보다는 부채 상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선불로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채권 증서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품권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일시 정지된다. 이에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불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CGV, CJ푸드빌, 신라호텔 등 20여 곳의 제휴처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한 실정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단기적 수익 개선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MBK는 사모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 창출을 우선시했으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발표를 앞두고도 점포 정리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원이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회생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당시 141개에서 126개로 줄었고, 점포 매각이 진행되면서 종업원 수도 2015년에 비해 26.5%가량 감소한 바 있다.

MBK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홈플러스를 운영해 온 '쪼어짜기식' 경영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회생계획안 발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점포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의 점포에 기대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MBK·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법원이 보장하는 채무 이행 유예 조치에서 비롯된다. 회생 절차상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받기 전까지는 일부 공익채권에 한 해 변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채권은 상환이 제한된다. 회생계획안은 6월 제출 예정이지만 인가 이후에도 변제 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지연돼 상품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정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는 소비자의 상품권 가치가 낮아지

거나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생계획안의 단기성 문제는 법원이 MBK·홈플러스의 고용 보장 조건을 내걸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법원은 MBK·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점포 매각,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별다른 조치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강 의원은 "MBK는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 사업부 매각 등이 포함되지 않은 회생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점주가 본사의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재가 쪼어짜기식 경영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모펀드의 구조에서 점주는 매각, 폐점 등 경영의 사결정에서 배제된다. 이에 점주가 투자자와 같은 본사의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해다. 이 교수는 "점주나 직원 등 현장에 놓여 있는 이들은 사모펀드의 경영 전략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등 선불 결제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상품권은 투자나 수익 목적이 아닌 소비활동을 전제로 한 선불 결제 수단이다. 기업회생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신현한(연세대학교 재무전공) 교수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일반적인 채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우선 변제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회생절차가 실질적인 기업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 법원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회생계획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원이 MBK·홈플러스 측에 고용 유지 방안을 포함한 자구책 제출을 전달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신 교수는 "법원이 단순한 채무 조정 절차를 넘어, 회생 과정 전반에서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영향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회생계획안 수립 과정에 있어 점주, 노동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규제와 대형마트 산업 구조 문제 해결을 과제로 한다"며 "사모펀드의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되는 대표 사례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환호하는 시민들



▲부동켜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

눈물과 환호로 뒤덮인 광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 세대가 탄핵 찬성 집회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파면 선고 현장에서 청년들은 한데 모였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외쳤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 속에서 2030 세대는 빛을 받았다. 집회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 찬성’을 외치는 청년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나며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있어 결정적인 여론 형성 주체로 부상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현주 학생은 “민주시민이라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집회 참가가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농민,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던 이들이 중심이 됐다. 탄핵 정국 이전까지 이들은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타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광장으로 나온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연대했다. 무관심 속 차별을 일상으로 살아온 이들의 의견이 특정 소수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가 인식하게 됐다. 김 학생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게 결국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결집은 청년들로 하여금 연대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 약자의 연대를 목격하며 청년층 사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김철규(윤석

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활동가는 “약자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며 민주주의를 지킨 모습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층은 지속적인 연대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표명한다. 타인에 대한 항구적인 관심은 더 나은 해결책을 고안하고, 이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낳는다. 강예빈(성공회대학교 제4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언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법학과 1학년 재학 중인 김서희 학생은 “긍정적인 연대가 계속돼 사회 속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탄핵 인용 기쁨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한다.



▲파켓을 든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고 있다.



▲탄핵 인용 발표 후 행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

관세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국익의 밭줄을 당기다

‘트럼프 쏘 관세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에 대해 관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다. 각국은 거세게 몰아치는 관세 폭풍에 대비하고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략 마련에 혈안이다. 관세가 무엇이기에 세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관세의 개념부터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자.

국제 질서를 설계하다

관세는 국가 간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며 무역 거래에서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오랜 세월 인류의 무역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 관세는 각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목적이 차츰 변화해 왔다. 박영태(동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시대적 전환 과정에서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고대 문명의 발흥과 함께 관세의 역사도 시작됐다. 당시 상인은 타국의 경계를 넘어 상업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통행세나 입국세의 형태로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특히 왕권이 강력했던 해당 시기에는 재정 확보가 곧 통치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이었기에 무역을 통한 관세 징수가 필연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김석오(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고대에는 육로나 항로를 통해 통행세와 상품세를 징수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세를 거치며 이동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관세는 점차 세분화되기 시작하며 부과 방식도 달라졌다. 상인들은 낙타, 마차, 선박 등을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장거리 교역로를 개척했다. 이에 다양한 지역 간의 물자와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관세는 단순히 통행세를 넘어 상품의 종류와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등 보다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품목별로 차등적인 관세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향신료나 귀금속 등의 사치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수입량에도 높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화를 거치며 무역 품목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는 재정 확보 수단에서 나아가 외국 상품의 유입을 조절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했다. 이처럼 관세는 국가의 산업 구조와 경제 방향을 조율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각국은 관세를 국력 경쟁의 수단으로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식민지에 대해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며 활발한 무역을 배경으로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사태인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고율의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수입 공산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국제 무역을 급감시켰고 경제 불황 심화로 이어졌다. 고율 관세를 둘러싸고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려는 관세 전쟁으로 촉발됐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 양기(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당시 자국 중심의 무역이 확산되며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국제 질서의 균열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관세로 인한 과거의 병폐를 반성하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됐고, 이후에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를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역 규범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해당 시기에는 관세를 0%로 부과하기도 하며 각국의 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관세를 인하하며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진행하려는 세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WTO하에서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으며 0%가량의 관세율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현재의 관세의 기준이 마련됐으나, 오늘날에 이르러는 관세가 정치·경제적 ‘협상카드’로 활용되는 양상도 보인다. 관세 인상을 통해 관세 부과국이 상대국의 수출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국은 외교적 협상이나 정책 조정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한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인 무역 규모가 약 33조 달러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다”며 “관세

를 이용해 무역에 제재를 가할 경우 정치·사회·경제적 협상을 이루기 수월해지므로 이 같은 움직임을 탄다”고 답했다.

무역의 흐름을 재단하는 기준선

관세는 여러 국가 간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대상,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먼저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세는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세만을 부과한다. 수출세는 국내 상품이 해외로 반출될 때 적용되며 러시아와 같이 원유 등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통과세는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할 때 과세되는 형태로, 국경이 맞닿은 국가가 많은 내륙국가에서 사용된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 부과되는 방식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각국의 경제 여건과 산업 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관세율이 조정된다. 이러한 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

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기본관세는 특별한 우대나 규제가 없는 일반 수입품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을 의미하며 잠정관세와 탄력관세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세율이다. 협정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 협약에 따라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호 호혜적 통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본적인 세율 기준이 설정되면 구체적인 과세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과세가격은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거래가격에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귀금속과 같이 부대비용 이상의 고유한 위험성을 지닌 상품의 경우, 단순한 거래가격만으로 적절한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등의 가격을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가격이 설정된다.

설정된 과세가격을 어떤 나라에 적용할지에 따라 다시 한번 부과 방식이 구분된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있다.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향한다. 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어떤 관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대응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김진규(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상호 무역법을 근거로 교역국이 자국 상품에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해 해당국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관세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지난 3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경제적 협상을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각각 25%, 10%의 인상된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보편관세 방식에 따라 기본관세가 10%로 인상된다. 이는 대다수의 품목에 인상된 관세를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 또한 이에 상응해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강력한 협상 권한을 갖게 된다”며 “협상 불발 시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인상된 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나 생산지가 미국이 아닐 경우, 모두 인상된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원자재 수급부터 생산 방식까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관세 조치 변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미국 산업에 맞춘 이원화된 생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간 무역 거래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이러한 협정 내용을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향후 협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위기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보편관세 인상이 발표되며 혼란이 발생할 바 있다”며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아래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보복형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중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미국을 기점으로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교수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무역 거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무역 환경을 고려한 지혜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언했다.

이러한 무역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 협정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정 가입을 통해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학생자치기구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자칫 무효가 될 뻔했던 재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덕분이다. 학생대표 후보자의 공약이 미비한 탓에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표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투표 마감 직전까지 개표 가능 비율인 50%를 넘지 못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서 학생자치기구 미선출 시 불이익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선거에 이어 또다시 50%를 겨우 웃도는 투표율이 기록됐다.

학생자치기구 선거 투표율은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대변한다. 금번의 투표율은 절반 정도의 학생만이 학생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학생자치기구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도 학생대표로서 적절하지 의문이 든다.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약으로서 적절할까. 이외에도 이미 진행되던 대외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캘린더 배포와 같이 특색 없는 공약이 주를 이룬다. 학생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행되던 공약을 반복하거나 단순 오락에 그친다. 이를 미뤄보면 저조한 투표율은 예견된 결과다.

유권자인 학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공약은 기표소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제동을 가한다. 미비한 공약에

한 표를 행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 대표라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학생회로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 학생 대표는 변화의 주체로서 작용해야 하는 자리다.

학생자치기구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다. 양질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 조직되고,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구상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불만을 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한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매년 반복되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약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단기적 공약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기려운 곳을 먼저 찾아서 긁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학생자치기구가 되길 고대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발밑에 도사린 재앙의 그림자

지난달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깊이 20m규모의 대형 싱크홀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재했던 예방책 속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에 이어 더 큰 참사가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하 공간 정보를 담은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닐까. 예견할 수 없는 인재는 없다. 발밑에 도사린 재앙의 그림자 속에서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기자수첩

오디션 예능 <언더피프틴>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더피프틴은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경쟁을 펼쳐 데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공개된 예고 사진에서 참가자는 선정적인 의상과 진한 화장을 한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코드가 삽입됐다.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방송사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이하 엔터 업계)의 행패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언더피프틴은 『대중문화예술평판발전법』 제2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해당 조항은 대중문화예술평판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평판인에게 과도한 노출 혹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하

아이돌 아닌 ‘아이’들

지만 언더피프틴은 아동·청소년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시켰을 뿐 아니라 상품로까지 보이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에 출연할 수밖에 없다. 방송업계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이들은 방송 출연 기회를 마다하기 어렵다. 어릴 때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은 인지도와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 손길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자연스레 아동·청소년을 엔터 업계와의 계약 관계에서 ‘알’의 위치에 놓는다. 방송 출연이 급급한 아이들은 엔터 업계가 출연을 요구하면 그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라도 방송사와 엔터 업계가 요구하는 행위를 묵묵히 따라야 했을 테다.

엔터 업계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예술인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책임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이 지정한 보호자로, 엔터 업계 소속이지만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자보다 어린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아야 하는 현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출연자들은 아이들 이전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엔터 업계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듬고 더 나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이한비 기자 hwanju325@gmail.com

■ 낙산에 올라

국민연금개혁 : 불신의 벽을 넘어서

2025년 3월 20일, 지난 18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27만 원을 납부하지만, 개혁안 시행 이후에는 39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이 제시되면서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현행 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과거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누리면서 높은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반면,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연금 수급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령화·저출산이 심화할수록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원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공적 연금 제도로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 세대가 연금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호철(패션 1)

■ 의화정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

2025.1.20, DeepSeek-R1이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중국 기업이 출시했다. 전 세계는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와는 달리 저렴한 개발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고 답변도 상세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무려 7일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EU는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면 왜 사용을 중지시키게 됐나? 다름 아닌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출을 우려해서다. DeepSeek는 사용자의 IP주소 및 위치 정보, 입력한 텍스트 내용, 타이핑 패턴 분석을 하는데, 이 중 타이핑을 분석한다는 점 때문이다. 사람마다 키보드 입력 방식이 각기 다르다. 키보드 사용 속도, 리듬, 키 누르

는 습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생체 인식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행동 패턴으로 특징적인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DeepSeek 측에 정보 수집 목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얼마 전 국정원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과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서비스와의 대화 시 주의 사항, 서비스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주의 사항, AI 모델 생성 기반 공격 대처 방안을 제시했고,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보안수칙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수칙, 민감한 정보(비공개 정보, 개인 정보 등) 입력 금지,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윤리성·적합성 등 재검증, 가짜뉴스 유포·불법물 제작·해킹 등 범죄에 악용 금지, 생성물 활용 시 지적 재산권·저작권 등 법률 침해·위반 여부 확인,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입력·학습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활용 금지, 연계·확장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취약점 등 안전성 확인, 로그인 계정에 대한 보안설정 강화 및 보안관리 철저를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지식을 주고는 있지만 항상 편리함 뒤에는 불편함도 뒤따른다.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강신(융합보안학과) 교수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진수정(인문 3)

동정란

정향진(CT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정 교수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기준(컴퓨터공학부) 교수
한 교수가 창업한 기업 '디에스'가 창업보육프로그램 디캠프에 최종 선정됐다.

진재한(디자인대학) 교수
진 교수는 지난 4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제19회 사진공모전

빛의 조각이 엮어낸
순간의 서사



공지사항 바로가기

- 모집기간 3월 17일(월) ~ 4월 25일(금)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 문 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